

## 네트워크로 본 동아시아 국제질서:

그 협력과 갈등의 동학

김 상 배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 <차 례>

- I. 머리말
- II.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갈등
  - 1. 동아시아 공동체, 협력의 비전?
  - 2. 동아시아 국가모델, 갈등의 현실!
- III. 동아시아 네트워크, 미래의 모색?
  - 1. 동아시아 네트워크 질서의 이해
  - 2. 네트워크로 본 미중경쟁과 동아시아
- IV. 동아시아 네트워크 속의 한국
  - 1. 네트워크로 본 한국의 외교전략
  - 2. 열린 네트워크 국가의 과제
- V. 맺음말

### I. 머리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널리 회자되기 시작한 용어 중의 하나가 ‘아시아 패러독스 (Asia Paradox)’이다. 아시아 패러독스란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적 차원에서의 안보 협력은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현상을 지칭한다. 개념적으로 보면 그리 엄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타 지역 특히 유럽과 비교해서 현상적으로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 경제적 협력과 정치적 갈등의 비대칭적이라는 점에서 대중적 설득력을 얻었다. 사실 정부 차원에서 아시아 패러독스의 담론을 생성해서 전파하는 행위의 이면에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수준에 걸맞게 정치군사 분야에서도 안보협력을 진행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고질적인 갈등을 풀어보자는 속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태까지 동아시아에서 추진되어온 지역협력과 그 제도화의 노력은 다소 이상적이고 수사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도적 협력이 있더라도 정부 간에 포괄적인 협력 구상을 내놓는 수준이다. 유럽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동아시아에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과 같은 초국적 지역통합체에 버금가는 ‘아시아연합(Asian Union, AU)’을 가까운 미래에 실

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냉정하게 돌아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유럽연합에 버금가는 지역통합체나 공동체를 논하기에는 물적 조건이나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 동아시아 협력이 정착되고 동아시아 공동체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합의뿐만 아니라 글로벌 패권과의 역관계 및 지역 내 세력 간의 역관계 등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매우 많다.

동아시아의 현실은 유럽과는 달리 지역 내의 갈등을 안정적으로 해결할 만큼의 제도화나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이 벌이고 있는 군비경쟁이나 영토분쟁 등이 가시적인 증거가 되겠지만, 그 이면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가 모델과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대중 차원의 민족주의적 정서 등이 일국 차원을 넘어서는 역내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동아시아 국가 모델은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19세기형 국민국가 모델이나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20세기형 발전국가 모델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국가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벌어지는 동아시아 국제정치가 협력보다는 경쟁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의 행보를 보면,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공동체의 구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국 차원에 고착된 발전전략과 민족주의적 정서가 표출되는 양상이 발견된다. 그야말로 협력의 비전과 갈등의 현실이 공존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21세기의 꿈'과 근대 국민국가 모델의 잔존이라는 '19세기적 현실'이 모순적으로 병존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이렇게 전개되는 형성되는 동아시아 네트워크 질서 속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어디일까? 협력과 경쟁의 비전이 공존하는 동아시아 네트워크 속에서 한국이 살아나갈 길은 어디일까? 그리고 나만 잘되자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네트워크 전반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이 기여할 바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좀 더 개념적으로 답하기 위해서, 최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서 주목 받고 있는 네트워크 이론을 국제정치학에 원용하고자 한다. 최근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화라는 현실에 직면하여 국제정치학 분야에서는 새로운 이론적 모색이 일고 있다. 그 중의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시도이다(Maoz, 2010; Hafner-Burton and Montgomery, 2006; Hafner-Burton, Kahler and Montgomery, 2009; Kahler ed., 2009; Nexon and Wright, 2007; Nexon, 2009; Goddard, 2009; 민병원, 2009; 김상배, 2014). 이러한 시도는 국민국가라는 노드 행위자의 속성이나 이들이 보유한 자원에 기대어 국제정치를 설명해온 기존의 주류 국제정치이론의 한계를 비판하는 모색의 일환이다. 특히 이 글은 사회학이론과 국제정치이론에서 흔히 거론되는 삼분법, 즉 공동체(community), 사회(society), 체제(system)의 스펙트럼에 대한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구성원리와 작동방식을 개념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원용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시각을 원용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그 이면에 자리잡은 갈등의 요인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펼치고자 한다. 특히 네트워크로 본 동아시아의 미래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협력의 비전으로서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의 출현과 그 한계를 검토하고, 갈등의 현실로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행보와 대중 차원의 민족주의를 지적하며, 동아시아의 미래를 모색하는 한 방편으로서 다층적인 네트워크의 부상과 그 의미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동아시아 네트워크 속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짚어볼 것이다. 동아시아의 미래를 네트워크로 보려는 시도는 단순히 협력의 비전으로만 보는 낙관론이나 갈등의 비전으로만 보는 비판론을 넘어서 협력과 갈등, 그리고 경쟁의 비전이 복합되는 동아시아의 현실을 입체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 II.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갈등

### 1. 동아시아 공동체, 협력의 비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아시아'라는 용어는 오늘의 아시아인들이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유럽과 대비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비롯한 중근동 지역을 처음으로 아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의 동아시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즉 아세아(亞細亞)라고 본격적으로 부르게 된 것은 17세기 초 예수회 선교사들이 제작한 지도를 통해서였다. 그러던 것이 동아시아인 스스로 아시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서세동점과 함께 본격적으로 유럽 중심의 근대 국제질서를 받아들이게 되는 19세기에 이르러서였다(하영선 편, 2008: p.16).

이렇게 해서 등장한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그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넓은 뿐만 아니라 다층적이기까지 하다. 좁은 의미에서 동아시아라고 하면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를 지칭하거나, 또는 러시아의 동부 지역까지도 포함하는 극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아세안(ASEAN)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동남아시아를 추가하여,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합친 지역을 동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이는 아세안+3가 포괄하는 범위와 대략 일치한다. 최근에는 동아시아의 범위가 더 확장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인도와 같은 서남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되기도 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호주와 뉴질랜드 등의 오세아니아 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환태평양 지역을 동아시아에 포함시킬 경우 관건이 되는 것은 미국이다. 글로벌 패권국으로서 미국은 지리적으로는 태평양 건너에 위치한 세력이지만 기능적으로는 동아시아의 행위자로서 활동해 왔다.

이러한 다층적인 동아시아의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진행되어 왔다. 여태까지 이루어진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유럽의 경우에 비교하면 매우 뒤져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거론될 수 있지만, 주로 역내 국가들 간의 힘의 불균형, 경제성장 단계의 상이함, 공동인식의 맹아적 형성 등이 지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노력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다섯 차원에서 진행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모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중일 동북아 3국의 협력체, 특히 한중일 정상회의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일본 측 제의로 비공식 조찬 모임을 가진데서 비롯되었다. 3국은 한 동안 아세안+3 회의의 일부로서 정상회의를 지속해오다가 2004년에 한국 정부가 아세안과 별도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여 2007년 제8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를 별도로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2008년에 제1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그 이후 한중일 3국은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동북아 경제협력과 지역협력을 논의하게 되었다. 2009년 10월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국 측이 상설 사무국 설립을 제안하였는데, 2011년 9월 1일에 한중일 협력사무국이 서울에서 출범했다.

둘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다. 6자회담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이 참여했다. 6자회담은 2003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1차 회담이 열린 이후

2007년 9월까지 비정기적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서 열렸다. 그러나 6자 회담은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로 표류 상태에 빠졌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규탄 의장성명을 채택하자, 북한이 이에 반발하면서 회담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2010년의 천안함 사건과 2011년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남북한과 북미 관계가 경색되면서 회담 재개가 불투명해졌다. 비록 난항을 겪다가 중단되었지만, 6자회담은 동아시아 다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형식으로 기대를 받았다.

셋째,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이다. APEC은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 간의 각료회의로 출범한 이후 1993년부터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해 왔다. APEC은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해서 국가 간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지역 경제공동체의 수립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경제 및 기술협력 등을 추진해 왔다. APEC은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총 21개국이 가입해 있다. 한국은 1989년 12개 창설 회원국 중 하나로서 APEC에 참가했으며, 2005년에는 한국에서 제13차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다. APEC은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의 국제 협력을 수행하는 데 머물러 있다.

넷째, 아세안+3이다.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맞았던 1997년에 30주년을 기념하는 아세안 10개국이 한중일의 정상을 초대해서 아세안+3 회의가 발족되었다. 지구화의 진전과 지역 협력이 강화되는 와중에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이 동아시아라는 큰 틀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취지였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나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강조하는 미국 주도의 질서형성에 대응하자는 의도가 바탕에 깔려 있었다. 아세안+3는 지난 15년여 동안 무역과 투자, 에너지, 환경보존, 식량, 지적재산권, 금융, 정보기술, 개발지원, 초국가적 문제, 자연재해, 보건 등 17개 분야에서 48개 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해 왔다. 현재로서는 기능적인 협력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끝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n Summit, EAS)이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기존의 아세안+3 참여 국가들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추가한 16개국이 역내 평화와 번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05년 1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첫 모임을 가지면서 출범했다. 2011년부터는 미국과 러시아도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2002년 11월 제6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제안된 26개 협력사업 중의 하나로서 제안되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3 회원국들 간에 벌어지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러시아 등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다섯 차원의 지역협력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동아시아 공동체'이다. 한중일 세 나라의 사례만 보더라도 미국이 주도하는 지구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담론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0년대 중반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제안하였다.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의 새로운 동맹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었던 것이다. 한국도 2000년대 초중반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을 펼친 바 있다. 중국도 아직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국력을 투영하는 새로운 환경으로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관건은 이러한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동아시아가 처한 현실을 반영하느냐, 아니면 단지 정치적 슬로건에 머무느냐의 문제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역사적·문화적 유사성과 지리적 근접성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지구화와

지방화에 대응하는 유럽 지역이나 미주 지역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동아시아 차원에서 공동체에 버금가는 지역질서를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다. 그러나 동아시아 공동체가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지리적 범위에서부터 의견이 갈라진다. 예를 들어, 중국이 지역으로서 동북아시아보다 동아시아 전체를 중요시한다면, 일본은 아태 지역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 아세안을 포괄하면서도 지역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한중일 3국의 협력에서 찾고자 한다. 이러한 동아시아 공간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는 각국의 전략적 이익과도 무관치 않다.

이러한 공간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온 제도화의 노력도 현재까지는 다소 이상적이고 수사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도적 협력이 있더라도 정부 간에 포괄적인 협력 구상을 내놓는 수준이다. 게다가 유럽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동아시아에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과 같은 초국적 지역통합체에 버금가는 ‘아시아연합(Asian Union, AU)’을 가까운 미래에 실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냉정하게 돌아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유럽연합에 버금가는 지역통합체나 공동체를 논하기에는 물질 조건이나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 동아시아 협력이 정착되고 동아시아 공동체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합의뿐만 아니라 글로벌 패권과의 역관계 및 지역 내 세력 간의 역관계 등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매우 많다.

## 2. 동아시아 국가모델, 갈등의 현실!

동아시아의 현실은 유럽과는 달리 지역 내의 갈등을 안정적으로 해결할 만큼의 제도화나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이 벌이고 있는 군비경쟁이나 영토분쟁 등이 가시적인 증거가 되겠지만, 그 이면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가 모델과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대중 차원의 민족주의적 정서 등이 일국 차원을 넘어서는 역내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동아시아 국가 모델은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19세기형 국민국가 모델이나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20세기형 발전국가 모델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국가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벌어지는 동아시아 국제정치가 협력보다는 경쟁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19세기 개항기 이후 일본, 중국, 한반도는 모두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근대 국민국가 모델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벌여왔다. 이중에서도 특히 일본은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에 앞서 근대 국민국가의 모델을 수용했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국의 길을 걷기도 했다. 중국은 20세기 초반 반(半) 식민지의 경험을 딛고 일어서 사회주의 체제의 실험과 개혁개방의 진통을 거치면서 국민국가 건설의 목표와 함께 새로운 패권국의 꿈을 꾸고 있다. 한반도의 경우에도 20세기 초반 근대 국가의 실험이 좌절당했던 조선은 식민지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해방 후에도 남북한 분단으로 인한 국민국가 실험의 굴절을 겪었지만 여전히 통일 국가의 꿈을 꾸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동아시아의 근대는 굴절된 미완성의 근대였지만, 19-20세기 국제정치의 전개과정 내내 근대 국민국가 모델이 일종의 ‘표준’으로 작동했다.

이러한 양상은 20세기 후반 한중일의 산업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전후 재건의 과정과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여타 경제 행위자들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발전국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1960-70년대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국가 주도의 정책을 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산업화도 동아시아 모델로 이해할 수 있는 국가 모델에 입각해 있다. 다만 일본과 한국이 경제성장기를 거치고 나서 민주화의 경로를 밟고 있는 데 비해서, 중국은 여전

히 소위 '베이징 컨센서스'로 불리는 정치적 권위주의와 시장경제의 복합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산업화의 과정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가 나서서 주도하는 근대 국민국가 모델, 특히 중상주의 모델에 입각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정보화 분야의 국가 전략에서도 나타난다. 주로 IT분야로 지칭되는 정보화 분야는 21세기 국가 경쟁의 새로운 목표로 떠올랐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IT협력구상과 담론은 19세기 이래 지속되어 온 근대 국민국가 모델에 입각하여 물질적 권력 자원을 강조하는 부국강병 담론의 연속선상에 있다. 실제로 동아시아 IT담론은 일본의 e-Japan, 한국의 e-Korea, 중국의 863계획 등과 같은 'IT강국론' 또는 '과학기술입국론'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또한 한중일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아시아 IT협력 구상은 정부가 주도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발전국가 담론의 연속선상에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IT기본법의 시행이나 IT전략본부의 설치, 한국의 정보통신부의 역할과 정보화촉진기금의 존재, 그리고 중국의 경우 1953년 이래 계속되고 있는 10.5계획이나 863계획 등은 바로 국가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담론에 기반을 둔 한중일의 IT협력 담론은 진정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이해될 수밖에 없다(김상배, 2006).

이렇게 정부 정책의 영역에서 발견되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쟁의 현실은 최근 한중일의 영토분쟁과 민족주의로 확대되어 발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식민지 역사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문제나 근대적인 의미의 영토적 경계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들 쟁점들은 안보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급속히 부상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고, 그러다가 다시 불거지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 간에 역사교과서 왜곡이나 종군위안부 문제, 독도 논란과 동해 표기 문제 등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서술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간의 신경이 곤두서기도 했다. 또한 중국과 일본 간에는 대표적 해양영토분쟁으로 알려진 조어도(釣魚島: 다오위다오/센카쿠) 문제가 불거지면서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일본 국내정치의 급속한 우경화는 한중일 간에 얽힌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꼬이게 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오프라인 공간을 능가하는 동아시아의 민족주의적 갈등 양상이 거세게 표출되고 있다. 사실 초국적으로 작동하는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공간에서 국가 단위에 기반을 둔 민족주의 관념이 득세한다는 것은 다소 역설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적 감정과 생각은 온라인 공간으로서 사이버 공간의 특성 때문에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지켜보면, 사이버 공간은 초국적 관념과 정체성을 생성시키는 공간인 동시에 국가 단위의 정체성과 관념이 응집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파악된다. 사이버 공간은 신세대들에게 개인의 자유와 즐거움을 찾는 사적인 공간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사건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공간을 능가하는 애국주의적 반응들이 결집되는 공간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사이버 공간의 신세대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탈근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지만, 국가와 민족이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대적인 가치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한국, 중국, 일본의 사이버 공간에서 독도, 동해 표기, 조어도 등의 문제를 놓고 오고가는 민족주의적 언사는 과격하며 동시에 매우 선동적이기까지 하다. 특히 한중일 간의 영토 논란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네티즌들의 주장은 상호 배타적인 감정을 담고 있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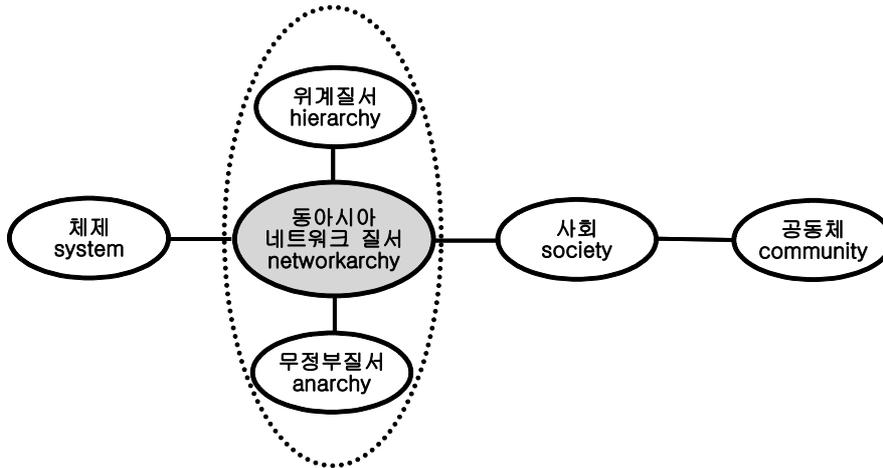
### Ⅲ. 동아시아 네트워크, 미래의 모색?

#### 1. 동아시아 네트워크 질서의 이해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의 행보를 보면,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공동체의 구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국 차원에 고착된 발전전략과 민족주의적 정서가 표출되는 양상이 발견된다. 그야말로 협력의 비전과 갈등의 현실이 공존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21세기의 꿈’과 근대 국민국가 모델의 잔존이라는 ‘19세기적 현실’이 모순적으로 병존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러한 논제를 좀 더 개념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학이론과 국제정치이론에서 흔히 거론되는 삼분법, 즉 공동체↔사회↔체제의 스펙트럼을 원용해보자. 이들 개념은 사회질서(또는 세계질서)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구성원리와 작동방식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먼저, 공동체(community)란 구성원들의 정체성이 공유되는 1차 집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관점을 국가 간의 관계에 확장해서 볼 때, 동아시아는 지역 구성원들이 국가 단위를 넘어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인가? 근대 이전 전통 동아시아 천하질서에서는 이러한 정체성의 공유가 있었을지 몰라도 현대 동아시아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정체성의 공유를 찾아볼 수 있을까?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보면, 전통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살았다는 막연한 유대감은 있을지언정 실질적인 의미의 공동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정체성의 공유를 오늘날의 동아시아 지역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한중일의 경우를 보면 정체성의 공유는커녕 상호 간에 인식의 편차와 감정적 앙금마저도 존재한다.

<그림-1> 동아시아 네트워크 질서의 개념적 위상



출처: 김상배. 2014, p.337

둘째, 사회(society)란 구성원들의 이익의 중첩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는 제도와 규범이 존재하는 2차 집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의 관점을 국가 간의 관계에 확장해서 볼 때,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일종의 ‘국제사회’가 형성되어 있는가?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 각국의 이익에 기반을 둔 제도와 규범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정부 차원의 협력 구상에도 불구하고

하고 유럽 지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의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정도의 지역협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협력의 양상을 개념적으로 ‘국제사회’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다.

이렇듯 동아시아 국가들이 구성하는 질서가 단위들 간의 정체성이 중첩되는 ‘공동체’도 아니고, 단위들 간에 이익과 규범을 공유하는 ‘사회’도 아니라면 무엇이든 보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체제(system)의 개념이다. 최소한의 의미로 정의한 체제는 구성단위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반드시 사회적 상호작용이거나, 아니면 소통과 공감의 관계일 필요는 없다.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들 간의 최소한의 물리적 상호작용만 있으면 체제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이러한 체제의 관점을 국가 간의 관계에 확장해서 볼 때,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이 구성하는 질서는 국제체제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구성하는 국제체제는 전통적으로 국제정치이론에서 상정하는 단순계로서의 체제라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 질서에서 국민국가만을 주요 행위자로 설정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에만 주목하기에는 기업이나 시민사회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의 초국적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은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다양하고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아시아 국제체제는 ‘단순계’가 아니라 ‘복잡계’로서의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즉 동아시아 질서는,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계로서의 ‘체제’와 이익과 규범이 공유되는 ‘사회’의 중간 정도의 수준에서 ‘창발(創發, emergence)’하는 복잡계로서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계’로서의 동아시아 질서는 전통적으로 국제정치이론이 상정하는 근대 국제정치의 무정부 질서(anarchy)와는 다르다. 그렇다고 현대 동아시아 질서를 전통 동아시아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위계질서(hierarchy)로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구성하는 질서는 무정부 질서의 국제체제도 아니고,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의 상위 권위로서 군림하는 위계질서도 아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서 보면, 동아시아 질서는,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정부 질서와 위계질서의 중간에 설정되는 ‘네트워크아키(networkarchy)’ 또는 ‘네트워크 질서’ 정도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화된 동아시아 네트워크 질서는 어떠한 내용을 갖는가? 현재의 동아시아 네트워크 질서에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의 전망이 중첩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초국적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의 전망’이다. 최근의 현황을 보면, 외교와 안보와 같은 공식 부문에서는 국가연합을 논할 정도의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지만, 경제나 문화와 같은 비공식 부문에서는 민간 행위자들이 활발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들이 구성하는 초국적 생산 네트워크는 동아시아의 범위를 넘어서 글로벌 차원에 미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산 네트워크와 일본 기업들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중요한 역할 고리를 담당하는 새로운 생산 네트워크가 부상하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생산 네트워크의 이면에는 화교자본을 기반으로 한 경제 및 민족 네트워크가 깔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밖에도 동아시아에서는 민간 네트워크 차원의 다양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이주나 노동자들의 이동, 시민사회 교류, 관광교류, 학술교류, 문화교류, 스포츠 교류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패권의 전망’을 담고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이다. 네트워크는 교류와 협력의 전망뿐만 아니라 경쟁과 지배의 전망도 담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권으로서 중국의 부상이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네트워크가 등장하더라도 수평적이고 초국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중국이 주도하는 동심원적인 위계적 네트워크가 부상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연결된다. 사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볼 때, 전통 동아시아의 천하질서는 제국적인 동심원 질서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일종의 천하국가(天下國家)의 제국적 주권이라는 구성원리를 단위 차원에서 실현한 국가들이 동아시아에 존재했다. 이들 국가의 관계는 예(禮)의 무대 위에서 사대자소(事大字小)에 원리에 근거한 책봉관계와 조공관계에 의해서 조율되었다.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부상은 어느 한 국가의 국력이 증대된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러한 전통질서의 부활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마지막 네트워크는 '경쟁의 전망'이다. 중국의 부상에 주목하는 논의의 이면에는 세계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힘의 이동'에 대한 관심이 깔려 있다. 최근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이에 걸맞은 군사력과 외교력, 그리고 소프트 파워까지 갖추고 미국의 글로벌 패권에 도전할 것이냐가 주요 관건이다. 사실 21세기 세계정치에서 자웅을 겨룰 강대국인 두 나라의 관계는 단순한 양자관계의 의미를 넘어서 동아시아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의 양대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새롭게 부상할 글로벌 및 동아시아 질서의 미래를 엿보게 하는 핵심이다.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미중 패권경쟁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네트워크가 서로 경합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미중 네트워크 경쟁에는 기존의 국가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초국적으로 활동하는 비국가 행위자들도 활발하게 참여한다. 그야말로 미중 패권경쟁에 반영된 동아시아 세계정치는 다양하고 다층적인 네트워크의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요컨대, 21세기 동아시아 질서는 지구화 시대의 초국적 네트워크의 부상, 중국이 주도하는 전통 동아시아 질서의 부상, 그리고 패권경쟁과 국가경쟁으로 대변되는 근대 국제질서의 잔존이라고 하는 세 가지 가능성이 복합된 형태로 발현되는 모습이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 네트워크 질서는 주권국가 단위의 근대 국제질서의 모습이 압도하는 가운데 지구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현되는 탈(脫) 국제질서가 중첩되고, 향후 중국 중심의 전통 천하질서의 구상이 가미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본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현재는 주권국가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가운데 이를 침식하는 새로운 변화들이 늘어나고 있는 복합적인 네트워크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 2. 네트워크로 본 미중경쟁과 동아시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미래에 대한 논의 중에서 미중 패권경쟁의 가능성과 그것이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미치는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20세기 후반 이래 세계정치 변화의 핵심은 탈냉전의 맥락에서 본 미국의 패권 쇠퇴와 중국의 부상, 그리고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러시아의 재(再)강대국화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부상은 21세기 세계정치의 최대 화두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군사적인 의미에서 본 새로운 도전국가 또는 지역패권의 등장인가?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새로운 산업대국의 도전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 전통 동아시아 천하질서의 부활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는 방식은 이론적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21세기 세계정치에서 중국이 그야말로 신흥권력(emerging power)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신흥권력으로서 중국의 부상에 주목하는 논의의 이면에는 세계정치에서 벌어지는 권력변환

에 대한 관심이 깔려 있다. 최근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이에 걸맞은 군사력과 외교력, 그리고 소프트 파워까지 갖추고 미국의 세계패권에 도전할 것이냐가 주요 관건이다. 그런데 이러한 권력변환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나라가 힘이 더 세어져서 상대를 압도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제질서에서 세력균형이 변할 것이라는 통상적인 인식의 범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근대 국민국가들의 부국강병 게임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를 보았던 전통적인 시각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의 부상과 여기서 파생하는 미중 패권경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좀 더 복합적인 시각, 즉 이 글에서 제시하는 네트워크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두 나라 간에 발생할 힘의 이동은 여태까지 우리가 근대 국제정치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성격이 다른 권력게임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1세기 세계정치에서는 군사력과 경제력의 게임뿐만 아니라 지식력을 확보하려는 게임이 새로운 세계정치의 양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력 게임의 승패는 전통적인 자원권력의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권력 개념의 잣대에 기대어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새로운 권력게임의 장에는 기존의 국가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초국적으로 활동하는 비(非)국가 행위자들도 활발하게 참여한다는 사실이다. 그야말로 중국의 부상과 미중 패권경쟁으로 대변되는 21세기 세계정치의 권력변환은 다양하고 다층적인 모습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을 좀 더 구체적인 미중 패권경쟁의 구도에서 살펴보자. 사실 21세기 세계정치의 패권을 놓고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은 선도부문으로서 사이버 공간에서, 또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오프라인 공간까지도 포함하는 21세기 세계정치의 신흥공간에서 각기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선도부문에서 벌어지는 패권국과 도전국의 경쟁 사례들은 근대 국제정치의 역사에서 여러 차례 나타난 바 있다. 가장 비근하게는 정보화 시대 초기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둘러싸고 선도부문에서 나타났던 미국과 일본의 경쟁에서 찾을 수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세기 영국과 독일의 경쟁이나 20세기 미국과 소련의 경쟁에서도 그 모습이 발견된다. 이러한 패권경쟁은 이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 초점을 미중관계로 옮겨 놓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보면 향후 미중 신흥권력 경쟁의 양상이 기존의 국제정치에서 국가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전통적인 권력 경쟁의 양상을 답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미래의 미중경쟁이 과거에 그랬듯이 지배적 행위자로서 국민국가들이 나서는 모습으로 나타날까? 미중경쟁의 미래를 굳이 군사력과 경제력이라는 근대 국제정치적 의미의 물질적 권력의 잣대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미국과 중국 중에서 누가 21세기 패권을 잡더라도, 19세기의 영국과 독일이나 20세기의 미국과 소련 또는 미국과 일본이 했던 것과는 상이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서 패권의 지위에 오를 가능성은 없을까?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예견되는 미래 세계정치의 권력구조는 어떠한 모습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기존의 발상과 시각을 전환하는 문제와 밀접히 연결된다.

먼저 미중경쟁이라고 할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경쟁을 벌이는 행위자들을 ‘미국’과 ‘중국’이라고 부를 경우, 여기서 ‘국(國)’으로 통칭한 행위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에서 ‘국(國)’은 현실주의가 상정하는 국민국가와 같은 단일 행위자(unitary actor)일까? 미중경쟁을 ‘두 나라 간 경쟁’이라고 보는 것은 맞는데 이를 두 국민국가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을까? 미중경쟁에 나서는 행위자는 ‘누구의 미국’이고 ‘누구의 중국’인가? 여전히 양국의 정부를 이끌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이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으로만 보는 것이 맞을까?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현재 관찰되는 ‘두 나라’라는 행위자들은 국가-기업-사회의 복합체로서의 성격이 더욱 커진 복합 네트워크 행위자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행위자를 국가 행위자를 중심으로 재명명하면 일종의 ‘네트워크 국가’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미중경쟁은 국가 간(inter-national) 경쟁이라기보다는 네트워크 국가들이 경합을 벌이는 네트워크 간(inter-network) 경쟁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사실 되돌아보면 미국과 중국은 이미 20세기에요(또는 그 이전에도) 전형적인 국민국가의 모습이 아니라 연방제적인 복합국가(또는 일종의 네트워크 국가)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김상배, 2014).

둘째,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권력게임의 양상을 전통적인 물질적 자원권력의 게임으로 보아서는 그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물론 21세기 세계정치에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패권경쟁에는 전통적인 부국강병 경쟁의 시각에서 본 군비경쟁이나 무역갈등, 환율전쟁 등의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부국강병의 측면들은 여전히 양국과 주변 국가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경쟁은 첨단산업·신흥경제, 디지털 문화·공공외교, 사이버 안보·환경안보 등의 분야에서 벌어지는 네트워크 권력게임이 관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첨단산업·신흥경제의 이슈로서 컴퓨터 산업과 인터넷 비즈니스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 중국은 단순한 가격경쟁이나 품질경쟁의 차원을 넘어서는 표준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표준경쟁은 최근 들어 구글(G), 아마존(A), 페이스북(F), 애플(A) 등(일명 GAF)과 같은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과 바이두(B), 알리바바(A), 텐센트(T) 등(일명 BAT)으로 대변되는 중국 인터넷 기업들 간의 경쟁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기업 간 표준경쟁의 이면에 존재하는 양국 정부의 역할에도 주목해야 한다.

디지털 문화·공공외교와 관련하여 두 나라가 벌이고 있는 사이버 공간의 매력경쟁도 신흥권력의 세계정치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의 문화활동,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공공외교는 권력분산, 권력변환, 권력이동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신흥권력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예를 들어, 미국 영화산업의 본산지인 할리우드가 담당해온 매력 세계정치의 역할을 보면 비국가 행위자들이 발휘하는 신흥권력의 위력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사이버 안보 분야는 미중관계의 핵심적인 갈등 사안으로 등장했다. 이는 사이버 안보 문제가 단순히 온라인의 시스템 보안이나 정보보호의 문제를 넘어서는 지정학적 관심을 끄는 신흥안보의 이슈가 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최근의 전개양상을 보면 미중 양국 간의 외교적·군사적 갈등까지도 예견케 하는 상황으로 급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둘러싼 국내외 제도와 규범 형성을 둘러싼 ‘문명표준경쟁’의 양상까지도 내비치고 있다.

끝으로, 미중 신흥권력 경쟁의 결과로서 등장할 미래 세계정치 권력구조의 모습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단순계적인 권력이동론에만 입각한 설명은 미흡하다. 신흥권력의 시각에서 보면, 현재 창발하고 있는 권력구조를 전통적인 세력전이론과는 얼마나 다르게 볼 수 있을까? 적어도 권력의 소재가 두 나라 중 어느 하나에게로 ‘이동(shift)’하는 모습이 아니라 네트워크 국가로서의 두 나라가 서로 얽히면서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벌이는 네트워크상의 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러한 시스템은 국제체제(國際體制, inter-national system)라기보다는 이른바 ‘망제체제(網際體制, inter-network system)’로 개념화되는 모습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가

운데 어느 한쪽이 좀 더 많은 ‘중심성’을 발휘하는 모습 정도가 아닐까? 다시 말해 이러한 와중에 그려지는 권력구조의 모습은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상(像)이 아니라, 이른바 ‘세력망(Network of Power, NoP)’의 상이 아닐지? 이렇게 벌어지는 ‘네트워크 간 정치(inter-network politics)’ 또는 망제정치(網際政治)의 구조와 동학, 그리고 이러한 밑그림 위에서 두 강대국이 건축하려고 하는 글로벌 및 동아시아 지역 아키텍처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보는 것이 향후 연구과제로 제기된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세계정치와 신흥권력의 부상에 직면하여 한국(좀 더 미래지향적인 의미로 보면 통일 한반도)도 미래전략의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주체변환, 권력변환, 구조변환의 메가트렌드에 대응해야 할 과제가 제기된다. 21세기 세계정치에서 새로운 지형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미래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전통권력의 발상을 기반으로 한 근대 국제정치의 틀을 넘어서는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비유컨대 ‘늑대’의 위협으로부터 초가집, 나무집, 벽돌집을 지으려했던 ‘돼지 삼형제와 늑대’의 우화를 거꾸로 보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늑대(근대 국민국가 행위자)’가 쳐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초가집이나 나무집보다는 벽돌집을 짓는 것이 적합한 대응양식이었다면, ‘거미(탈근대 복합 네트워크 행위자)’가 습격을 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집’을 지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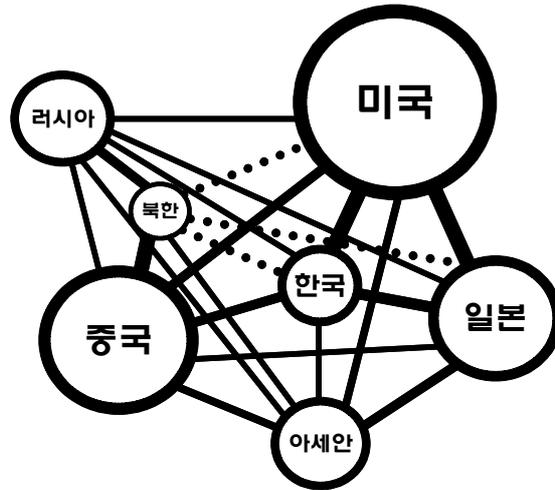
#### IV. 동아시아 네트워크 속의 한국!

##### 1. 네트워크로 본 한국의 외교전략

변환의 와중에 있는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좀 더 가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그림-2>과 같은 동아시아 네트워크 질서의 가상도를 그려보자. 네트워크 이론에서 사용하는 사회연결망분석(SNA)의 시각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이 그림은 엄밀하게 데이터를 넣어서 그린 것이라기보다는 대략의 데이터를 염두에 두고 직관적으로 그려본 것이다. 현재 가용한 국력, 즉 행위자가 보유한 자원권력의 지표로 사용되는 군사비 지출과 국내총생산(GDP)에 비추어 대략 각 행위자의 크기와 테두리 선의 굵기를 조절하였다. 이러한 일곱 개 행위자의 연결망 그림을 그리는 데 고려한 지표는 정치군사 동맹의 유무와 강도, 무역교류의 빈도, 양국 간의 친소(親疎) 관계 등이다. 마찬가지로 실제 데이터를 사용했다기보다는 직관적으로 평가하여 네 단계로 구별하여 그렸다(하영선·김상배 편, 2010: pp.80-81).

이렇게 그려본 동아시아 네트워크 그림에서 한국은 네트워크 전체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한국이 담당할 중개자의 역할과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세 개의 구도가 눈에 띈다. 첫째는 글로벌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국가의 패권경쟁의 사이에서 한국이 무엇인가 적극적인 중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둘째,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서 한국이 담당할 수 있는 중개의 역할이다. 끝으로, 북한과 주변 네 나라의 사이에서 한국이, 남북한의 독특한 관계를 활용하여, 담당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이다. 물론 이외에도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네트워크 구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의 종류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림-2> 동아시아 네트워크 속의 한국



출처: 하영선·김상배. 편. 2010. p.80에서 응용.

동아시아 네트워크 속에서 한국이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현재의 네트워크 구도에서 가능한 한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프레임을 짜는 일이다. 이는 동아시아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가 미리 주어져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행위자들이 새롭게 구성해 가는 네트워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질서 구축 또는 아키텍처 형성의 노력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의 프레임 짜기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한 개방성의 논리를 앞세워 동아시아 공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담론을 생성하고 있다면,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의 대내외적 성장이 안정된 궤도에 오를 때까지 국민국가의 주권과 민족주의의 발상으로 방어의 담론을 생성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와중에 일본은 다소 수동적인 자세로 미국의 프레임 짜기에 편승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고, 러시아도 북한을 관통하는 에너지 네트워크 건설 계획 등을 앞세워 동아시아 세계정치에의 복귀를 타진하고 있다. 또한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각종 군사도발 및 평화공세를 마다않는 북한도 나름대로의 프레임 짜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네트워크 프레임 짜기 전략은 어떠한가?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강대국의 시각이 아닌 중견국의 시각에서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프레임을 짜려는 노력이다. 최근에는 한국 외교도 미국이나 일본에 편승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독자적인 프레임 짜기의 시도를 벌인 바 있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당시 제기되었던 ‘동북아 균형자론’이나 ‘동아시아 중심국가론’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들 구상은 19세기 국제정치의 잣대로 21세기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재단하는 우를 범하거나, 또는 주변정세의 구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함으로써 모처럼 밝힌 기회의 불씨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 외교가 어떠한 프레임 짜기를 시도하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급속히 부상하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사이에 끼어서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받는 ‘타율적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중견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프레임 짜기의 고민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러한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구도와 한국의 위상에 대한 논의의 궁극적 관심은, 한국이 이러한 네트워크 구도 내에서 일종의 표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이다. 사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 냉전기와 경제성장기의 경험은 한국으로 하여금 스스로 표준을 세우기보다는 강대국들이 설정해 놓은 표준을 얼마나 잘 수용하느냐의 문제에 몰두케 했다. 그러나 21세기 초엽에 선 한국은 개도국에서 중견국으로 발돋움한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서방 일변도의 단순외교를 넘어서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한 복합외교를 펼쳐나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최근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 진출, 즉 한류(韓流)는 매우 흥미로운 표준 세우기의 사례를 제공한다. 초창기의 한류가 드라마와 영화 콘텐츠를 내세워 주로 동아시아 시장을 겨냥하여 성공했다면, 2000년대 후반 이후의 한류는 한국의 대중음악, 즉 K팝을 내세워 아시아 전역을 넘어서 글로벌 대중문화의 본산인 미국과 유럽, 그리고 저 멀리 남미에 까지도 진출하고 있다. 한류는 대중문화 콘텐츠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던 시대로부터 이제는 대외적으로 수출하는 시대로의 이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그야말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입지를 트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한류의 성공, 그 비결은 무엇인가? 우선 한류의 성공은 훌륭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생산하여 동아시아와 전세계로 전파시킨 한류기업과 민간 부문의 역량의 덕이다. 이러한 한류의 역량은 20세기 후반 한국이 빠른 산업화를 바탕으로 이룩한 경제적 성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한류는 좀 더 나은 문화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된 한국의 경제력의 상징이며 소위 CT로 알려진 기술력의 상징이다. 실제로 문화 비즈니스 차원의 한류는 한국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이나 현지합작 등의 형태를 통해서 동아시아 차원에서 형성되는 문화산업 분야 네트워크의 덕을 보았다. 이수만의 SM, 양현석의 YG, 박진영의 JYP 등과 같은 한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전략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볼 때, 한류는 21세기 세계정치의 장에서 국가 행위자가 아닌 민간 행위자들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복합 네트워크 현상이다. 예를 들어, 최근 K팝의 성공을 주도한 한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정부의 큰 도움을 받지 않고도, 아시아와 세계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해 왔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문화와 IT가 복합된 CT(culture technology) 분야에서 디지털 역량을 보여주었으며, 새로운 발상의 네트워크 전략을 구사하였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냈다. 복합 네트워크의 양상으로 전개되는 한류의 성과가 주로 창의적 발상을 갖춘 민간 행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한류의 역량 또는 실력과 함께 그 성공의 비결로 거론되는 것은 한류에 담기는 한국 문화콘텐츠의 매력이다. 특히 상품으로서의 한류를 넘어서 한류의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측은 한류에 담기는 한국 대중문화의 매력을 논한다. 권위주의를 거쳐서 경제발전을 했지만 결국 민주화를 달성한 한국형 발전모델이 문화콘텐츠에 담는 매력상품 중의 하나이다. 다시 말해, 한류 영화나 드라마의 저변에 깔리는 내용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민주주의를 이룩하였으며, 그러면서도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잃지 않는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의 모델이다. 한국문화 고유의 가치관도 한류에 담기는 콘텐츠이다. 초창기 한류 상품들과는 달리 TV 드라마 '대장금'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한국적 가치의 문제와 연관된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그 이전에는 서구문화를 베낀다고 생각했는데 '대장금'은 한국이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을 한국적 시각에서 소화해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한류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의 전도사이다.

그런데 이상에서 살펴본 한류의 실력론과 매력론에는 조심할 부분이 있다. 한류의 성공을 내가 잘나서 그랬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오류이다. 다시 말해 한류가 성공한 것은 한류 기업이나 민간 문화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난 콘텐츠 생산 능력과 비즈니스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라거나 또는 한국 문화가 다른 나라의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상호적일 수밖에 없는 국제문화 현상을 문화생산자의 능력, 즉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로 환원시켜 설명하는 잘못을 범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네트워크,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류 성공의 핵심은 실력의 과시나 매력의 발산보다는 문화 네트워크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한 데 있다.

최근 한류는 동아시아 한류에서 글로벌 한류로 전이되고 있다. 한류로 대변되는 문화세계 정치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발신자와 수신자 또는 생산자와 수용자의 상호과정을 좀 더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한류는 이 양자가 구성하는 복합적인 관계, 즉 네트워크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논제이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보면 한류 성공의 비결은, 소프트 파워의 논의가 암시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우월한 지식과 문화를 전파한 데 있기보다는, 대상 국가의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글로벌 차원의 수용자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공감을 얻어낸 데 있다. 다시 말해 한류의 성공은 글로벌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화산업의 변환을 배경으로 하여 한류 콘텐츠 생산자들의 실력과 매력과 동아시아 및 글로벌 수용자들의 문화적 취향이 적절하게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현상은 국내외에서 영향력을 늘려가고 있는 문화 수용자들의 부상이다. 한류를 수용하는 국내외 팬들은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대중문화의 트렌트를 이끌어 가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들은 한류 기업들이 형성하는 네트워크와는 다른 모습의 자생적이고 수평적인 소셜 네트워크의 형태로 움직인다. 실제로 한류의 이면에는 인터넷 상의 카페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고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문화 콘텐츠를 나누고 즐기는 신세대들의 팬클럽 네트워크가 있다. 프랑스의 코리아 커넥션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의 한류 아이돌 팬클럽 등이 사례이다. 또한 K팝 스타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통해서 거둔 성공의 숨은 공신으로서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를 드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볼 때, 한류의 성공은 발신자로서 한류 기업들의 현지 차별화된 네트워크 전략과 수신자로서 현지 팬클럽의 소셜 네트워크가 접목되면서 판매와 소비의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소통과 공감의 네트워크가 구성된 데 그 비결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형성된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에 담기는 한류 문화콘텐츠의 우수성과 매력도 무시할 수 없는 성공의 요인이다. 여기서 한국은 구미의 대중문화를 동아시아의 취향에 맞게 가공하여 전파하는 문화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이러한 문화중개자의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 내재한 문화유전자를 발견하거나 퓨전코드를 개발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고유문화와 보편적 가치가 얼마나 동아시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한류는 이러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아야 할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사례이다.

## 2. 열린 네트워크 국가의 과제

동아시아를 향해서 한국이 네트워크 전략을 추구해 나감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개념을 단순히 전략적인 도구로만 받아들여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동아

시아 국제질서를 이해하고, 이 안에서 한국이 자리잡을 위치와 담당할 역할에 대한 프레임을 짜서,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동아시아 표준의 수립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한국의 협소한 국가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전략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을 대한다면 그 결과는 어떠할까? 전략으로서 네트워크 외교전략을 채택하는 실행주체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을 때, 정작 한국의 국가모델은 여전히 근대적인 의미의 노드형 행위자, 즉 근대 국민국가 모델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그러한 네트워크 전략 자체가 궁극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동아시아 국제질서나 한국의 외교전략에 대한 논의에 네트워크 시각을 원용했던 작업이 존재론적 차원에서 한국의 국가이익과 국가형태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과거의 개도국에서 오늘날 이른바 중견국(中堅國, middle power)으로 발돋움한 한국이 효과적으로 외교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존재론적 고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사실 해방 이후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한국외교의 역량과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최근 한국외교의 정체성을 새로이 새워야 한다는 학계의 논의는 이러한 현실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다. 실제로 한국은 군사력과 경제력 분야에서 이룩한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10-15위권의 국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2년 6월에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을 달성한 나라들의 대열인 이른바 '20-50클럽'에도 진입하여 개도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졌다. 국가 브랜드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한국은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주는 나라'의 이미지를 세워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IT와 인터넷 분야에서 이룩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이나 TV 드라마와 K-팝을 앞세운, 한류 열풍도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엿보게 하는 사례들이다. 그야말로 해방 이후 한국이 개도국으로서 보여 왔던 외교적 발상과 행태를 탈피하고 중견국으로서 새로운 외교적 정체성을 모색할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중견국 한국이 대외적으로 외교적 정체성을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는 문제와 더불어 대내적으로도 중견국이라는 국가의 성격, 즉 어떠한 형태의 국가냐고 하는 존재론적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중견국의 국가 성격의 문제는 중견국 외교의 방법과 원칙, 목표가 되는 국가이익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를 통해서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그 안에서 한국의 위치에 대한 논의가 주로 밖으로부터 규정되는 중견국의 대외적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였다면, 내부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중견국의 구조적 위치에 대한 논의는 중견국이 추구할 국가이익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다시 말해, 국가이익 개념의 재규정 문제는 중견국이 자리 잡은 구조적 위치에 대한 고민을 반영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중견국은 강대국이 추구하는 것과 같이 확장된 국가이익의 개념을 바탕으로 행동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개도국의 경우처럼 협소하게 규정된 국가이익의 개념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최근 한국이 처한 중견국의 입장을 보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협소하게 정의된 국가이익만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 한국은 20세기 후반 근대화와 산업화의 추진 과정에서 국내적으로 협소한 국가이익을 추구해 왔다. 대외적으로도 개별국가 단위의 차원에서 본 국가이익의 추구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개도국의 위상을 넘어서 중견국의 위치로 도약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기존의 국가이익에 대한 인식을 수정할 필요성과 당위성에 직면하였다. 중견국 한국은 종전과는 달리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국가이익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안팎으로 확장된 외교전략을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적어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중견국 외교가 '달힌 국가이익론'이 아닌 '열린 국가이익론'을 바탕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첫째,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한국의 중견국 외교는 종전보다 좀 더 '부드럽게' 국가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군사력, 경제력 등과 같은 물질적 권력자원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밀어붙이는 힘, 즉 하드 파워(hard power)에 기반을 두고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패턴에서 탈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 이념, 외교와 같은 비물질적 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유인하고 회유하여 끌어당기는 힘, 즉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활용하여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과 통한다. 더 나아가서 이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교묘히 섞는 스마트 파워(smart power)의 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음 장에서 설명할 네트워크 외교전략에 대한 논의와 통한다. 사실 국제정치의 역사를 보면, 중견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일정한 수준의 하드 파워를 갖추게 되면, 즉 속성론으로 본 국력이 중간 규모로 커지게 되면, 하드 파워 외교의 패턴을 넘어서 소프트 파워 외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최근에 공공외교나 한류와 같은 소프트 파워 외교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한국의 사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한국의 중견국 외교는 상호 간의 공동이익을 만족시키는 외교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별 국가이익의 일방적 추구를 넘어서 인식의 공유와 연대의 형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상호이익은 어느 국가가 지닌 내재적 속성의 유사성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일군의 국가들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이슈구조에서 유사한 구조적 위치를 점함으로써 발생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행위자들이 내재적으로 지닌 개별이익일수도 있고 유사한 구조적 위치에 놓임으로써 생겨나는 집합이익일 수도 있다. 1990년대 이후의 캐나다, 호주와 같은 국가들의 중견국 외교에 대한 논의도 바로 이러한 상호이익의 개념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는데, 무역이나 금융, 신항안보 분야에서 출현한 동지국가들의 연대전략이 거론되었다. 당시 중견국의 입장에서 볼 때, 물리적 공격에 의한 영토적 통합성에 대한 명시적 위협은 감소한 반면, 새로이 재편되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주권을 확보하는 문제나 초국적 이슈로 제기된 신항안보의 위협이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인식이 그 배경이 되었다.

끝으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목표라는 점에서 볼 때, 한국의 중견국 외교는 국제사회와 인류공동체의 보편적 규범에 부합하는 외교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익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실리외교를 넘어서 규범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당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규범외교의 추구를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중견국 외교의 규범적 성향은 '계몽된 자기이익'에 대한 관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인도적 국제주의(humane internationalism)'로서 개념화된 바 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이는 '착한(善) 외교,' 또는 '어진(仁) 외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 강조하는 구조적 위치론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중견국의 규범외교는 행위자의 기질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나라가 놓여 있는 구조적 위치에서 생성되는 점도 없지 않다. 다시 말해 중견국의 규범외교는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덜 이기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한 구조적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개발협력 외교, PKO 평화유지외교, 인도주의적 기여외교 등의 의미도 이렇게 구조적 위치에서 파악된 규범외교(즉 확장된 국가이익)라는 관점에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한편 새로운 국가이익의 개념에 기반을 둔 중견국 외교의 추진은 대내적으로 이러한 국가이익의 재규정을 감내할 국내적 지지 기반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중견국 외교의 추구는 많은 경우 글로벌 거버넌스의 참여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지불할 국내적 합의와 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구화 시대

를 맞이하여 글로벌 이슈들이 국내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늘어나면서 외교정책의 과정에 민간 및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기여할 여지가 많아졌다. 이러한 구도에서 특정 이슈 영역에서 중견국 규범외교의 실천이 국제적으로 기대됨에도, 국내 특정집단에 피해를 줄 가능성 때문에 국내적 반대에 봉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견국 외교는 약소국 외교의 실리주의와 이에 익숙한 기존 여론의 극복을 과제로 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제1세대(또는 제1.5세대) 중견국 외교의 출현에는 캐나다,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들의 (사회)민주적 국내체제의 성격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견국 외교의 국내적 기원을 강조하는 시각은,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견국 외교에 대한 구조적 위치론의 주장을 보완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한국의 국민들은 ‘양보하고 기여하는 소프트 파워의 중견국 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을까? 중견국의 국가이익이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궁극적으로 중견국의 국가모델을 재조정하는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좀 더 넓게 보면, 제3세대 중견국 외교는 전통적인 근대 국민국가 모델의 연속이 아니라 21세기 세계정치의 새로운 국가모델, 즉 네트워크 국가의 부상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네트워크 조직 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지구화, 정보화, 민주화의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에는 국민국가와 같은 ‘폐쇄체계(closed system)’의 국가모델이 아닌 개방체계의 모습을 따르는 열린 국가모델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중견국 외교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국민국가로서의 어느 중견국의 외교라는 차원을 넘어서 좀 더 열린 정체성과 국가이익에 기반을 둔 개방체계로서의 네트워크 국가가 추구하는 외교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국가에 대한 논의는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한반도 통일의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한반도 통일을 논하는 경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역시 기존의 노드의 발상을 넘어서 통일론의 지평을 여는 일이다. 사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통일(統一, reunification)이라는 용어는 근대 국민국가(modern nation-state)라고 하는 ‘노드(node) 차원의 발상’이 낳은 소산이다.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가 논하고 있는 한반도의 통일이란 다름 아니라 남북한에 나뉘어 살고 있는 한민족이 국민국가라는 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즉 ‘통일(統一)’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한반도의 통일이란 19세기 후반 개항 이후 지난 백여 년 동안 우리 민족이 추구해왔던 근대 국민국가 건설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설정되어 온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반도의 통일이 노드 차원에서 제기되는 목표인 것은 맞지만 그 목표가 노드 차원의 발상만으로는 풀 수 없는 ‘탈(脫)노드 차원의 과제’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의 통일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할 ‘네트워크 차원의 과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반도 통일전략의 방향은 ‘하나로 합치는 통일(統一)’의 전략이기보다는 ‘모든 곳으로 통하는 전통(全通)’의 전략, 즉 네트워크 통일의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남북한의 단위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 통합을 중심에 놓고서 안과 밖으로 국내외의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네트워크 국가의 건설과제로서 이해된다.

통일 네트워크 국가의 달성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네트워크와 함께 국내적 차원에서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사례만을 보더라도 최근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여론분열, 남남갈등 등이 효과적인 외교적 대응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정책, 정치적 소통체계를 총체적으로 재정비하고,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가 수세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지혜를 정책결정 및 실행과정과 연결시키고 이들을 이끌어 가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통일국가의 모델로서 네트워크 국가는 국가-비국가 행위자의 관계망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적인 네트워크의 등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네트워크 국가는 정부 간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 그리고 국민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지역주의의 강화 등을 배경으로 하여 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이나 북미,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모색되고 있는 지역통합의 움직임은 국민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네트워크 국가의 부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국가의 등장은 각 지역별로 상이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의 통일 네트워크 국가는 동아시아 차원에서 진행되는 네트워크 국가와 보조를 맞추어 필요성이 있다.

## V. 맺음말

이 글은 동아시아의 미래를 모색하려는 담론과 시도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협력의 비전으로서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의 출현과 그 한계를 검토하고, 갈등의 현실로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행보와 대중 차원의 민족주의를 지적했으며, 동아시아의 미래를 모색하는 한 방편으로서 다층적인 네트워크의 부상과 그 의미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동아시아 네트워크 속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짚어보았다. 동아시아의 미래를 네트워크로 보려는 시도는 단순히 협력의 비전으로만 보는 낙관론이나 갈등의 비전으로만 보는 비관론을 넘어서 협력과 갈등, 그리고 경쟁의 비전이 복합되는 동아시아의 현실을 입체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네트워크의 시각을 원용해서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국의 미래전략을 살펴보는 작업의 의미는 문명사적 변환에 직면한 것으로 자주 묘사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안고 있는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남다른 의미를 던진다.

실제로 21세기에 접어든 동아시아는 과거와 현재를 딛고 일어서 이제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글로벌화, 정보화, 민주화 등으로 대변되는 변환의 시대를 맞고 있는 동아시아는 이미 역사적으로 이에 비견될 큰 변환을 맞았던 적이 있다. 19세기 중후반 서세동점(西勢東漸)의 물결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원하지 않는 큰 변환을 겪고 감당해야만 했다. 그 변환의 핵심에는 대포와 군함으로 대변되는 서구 산업문명의 충격이 있었다. 당시 대포와 군함이 상징한 것은 단순히 파괴력과 정교함이 앞서는 서구의 무기(利器)만은 아니었다. 서구의 대포와 군함은 군사혁명, 산업혁명, 과학혁명, 인쇄혁명 등을 거치면서 발달한 근대 산업문명을 응축하여 반영했다. 이러한 산업문명을 토대로 하여 국민국가, 자본주의, 민족주의 등과 같은 근대의 제도적·이념적 골격이 갖추어졌고, 이를 국제적으로 확장한 근대 국제정치적 메커니즘이 새로운 '문명표준'으로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19세기 중후반의 변환이 산업문명의 충격으로 요약된다면, 21세기 초엽의 변환은 정보문명의 도래를 핵심으로 한다. 정보문명은 21세기 세계정치의 저변에 흐르는 물질·지적 조건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는 양식이나 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변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조직과 제도, 문화와 정체성의 변화까지도 포괄한다. 이러한 정보문명은 1960-70년대부터 미국에서 싹을 틔워 반도체와 컴퓨터,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외양을 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에 전파되었다. 여태까지 정보문명의 도래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적표는 그리 나쁘지 않다. 물론 만만치 않은 충격도 있었다. 예를 들어 1992년 일본은

소위 '컴팩 쇼크'라고 불리는 충격을 경험했는데, 미국의 PC업체인 컴팩의 시장공세가 '제2의 흑선'이 왔다고 비유되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2010년 소위 '아이폰 쇼크'라고 불린 충격을 받았다. 잘 나가던 한국의 IT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문턱에서 머뭇거리는 순간, 미국의 IT기업인 애플이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폰 단말기를 들고 나타났던 것이다. 이들 사례는 단순한 에피소드일 수도 있지만 좀 더 곰곰이 살펴보면 새로운 미국 발(發) '문명표준'의 위력을 엿보게 한다.

새로운 문명표준의 충격과 이에 대한 대응이라는 구도 하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들, 소위 '동아시아 담론'의 부상을 이해해야 한다. 동아시아 담론의 부상은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룩한 경제적 성장의 현실을 그 배경에 깔고 있다. 1980년대 일본의 성장과 1990년대 한국의 성장, 그리고 2000년대 중국의 부상에 힘입은 바 크다. 이들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아시아 담론은 20세기 후반 들어 진행되고 있는 미국 주도의 지구화와 정보화에 대한 대항담론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탈냉전과 9.11테러 이후 세계 유일의 패권으로 군림했던 미국의 주도권에 대응하려는 역사인식의 발로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부상하는 동아시아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이 구축한 다자적 연합전선은 '방어 담론'을 넘어서 '공세 담론'을 생성하는 양상마저도 보인다.

근대화와 산업화의 역사를 돌아보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도전에 대응하는 동시에 동아시아라는 지역공간을 매개로 하여 글로벌 세력과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최근 다양한 영역과 다층적 수준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행보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에서 네트워크 질서의 구축은 어떻게 가능할까? 동아시아 네트워크 내에서 경쟁과 갈등의 비전을 넘어서 협력과 화합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동아시아에서 국제사회와 지역 공동체 또는 동아시아 문명의 구축은 얼마나 가능할까? 이러한 동아시아의 비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는 차분한 노력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질서를 모색하려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실험이 궁극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열린 네트워크'의 추구이다. 소위 문명충돌론에서 그리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또는 동아시아 문명)의 추구가 글로벌 질서(또는 글로벌 문명)와의 충돌을 야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만약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독자적인 지역 네트워크의 구축을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와 경쟁하거나 협력한다고 할 경우 양자 간의 호환성 문제는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네트워크 시대로 대변되는 21세기 변환기를 헤쳐 나가는 동아시아는 글로벌 차원의 변화와 동아시아 각국 차원의 변화를 포괄하면서 '개방된 집중 공간'으로서 동아시아를 설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지금 동아시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문명 간의 충돌'이 아닌 '문명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혜이다.

## <참고문헌>

- 김상배. 2006.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IT협력의 미래.” 손열. 편. 『동아시아와 지역주의: 지역의 인식·구상·전략』 지식마당, pp.271-311.
- 김상배. 2008.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모색: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세 가지 가정을 넘어서.” 『국제정치논총』 48(4), pp.35-61.
- 김상배. 2014.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한울.
- 민병원. 2009. “[쟁점주제논평] 네트워크의 국제관계: 이론과 방법론, 그리고 한계.” 『국제정치논총』 49(5), pp.391-405.
- 하영선. 편. 2008.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동아시아연구원.
- 하영선·김상배 편. 2010. 『네트워크 세계정치: 은유에서 분석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Goddard, Stacie E. 2009. “Brokering Change: Networks and Entrepreneur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Theory*. 1(2), pp.249-281.
- Goddard, Stacie E. 2009. “Brokering Change: Networks and Entrepreneur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Theory*. 1(2), pp.249-281.
- Hafner-Burton, Emilie M. and Alexander H. Montgomery. 2006. “Power Posi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ocial Networks, and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0(1), pp.3-27.
- Hafner-Burton, Emilie M., Miles Kahler, and Alexander H. Montgomery. 2009. “Network Analysi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63, pp.559-592.
- Kahler, Miles. ed. 2009. *Networked Politics: Agency, Power, and Governanc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Maoz, Zeev. 2010. *Networks of Nations: The Evolution and Structure and Impact of International Networks, 1816-2001*.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xon, Daniel and Thomas Wright. 2007. “What’s at Stake in the American Empire Deb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1(2), pp.253-271.
- Nexon, Daniel, 2009. *The Struggle for Power in Early Modern Europe: Religious Conflict, Dynamic Empires, and International Chan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